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15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2015년은 현정부의 집권 3년차이며, 국정과제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향후 3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출발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굵직한 3대 복지과제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마무리 지었다. 복지재정의 미래전망을 어둡게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또한 과단성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큰 무리없이 시행되는가 싶더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압초에 부닥쳤다.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 파동이 겹치면서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연초부터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무상복지는 지속가능한가, 증세를 하려면 복지구조 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등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움직임은 현재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 당시의 복지정책의 원칙과 철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금년 7월부터 개별급여 형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의 외연이 확대되고 개별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라는 점에서 16년 만에 새로운 빈곤정책의 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커져가는 빈곤율과 벌어지는 양극화, 세계 최고의 노인자살율을 해결하지 못한다. 종합적인 틀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 3자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한 소득보장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가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50대 퇴직후 70대 은퇴시
까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계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보
장은 사회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건강보장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선택
진료의 축소, 상급병상의 일반병상 전환, 포괄간
호서비스 추진 등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의
도입은 획기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보험급여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물
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
였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이 없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장률이라는 목표치에 전착하기 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
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인 투자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이 많은 환자를 봐야하고 많
은 서비스를 투입해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의료패러다임 하에서는 의료시장의 양극
화를 심화시키고 의료비가 계속 증가해야만 병원
이 살아남게 된다.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의료의 양적 확충으로 치닫는 패러다임에서 벗어
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
강증진을 위한 투자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
요하다. 한편 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강조될 수 밖
에 없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의료산업을 육성하
고 지원하는 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
책이 균형을 잡아나갈 때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의료산업을 육성하되 해외수출산업으로
출구를 잡아야 국내의 의료비 급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큰 도전이다. 금년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1, 2차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정
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백화점식 혹
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있
었다. 여러 대책들이 세부적인 성과들은 거두었지
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목표치를 달성하
지는 못했다. 저출산 현상에 조급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응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들이 있는 반면
에,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에 근접하는 성공적인 국가들을 보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난제이다. 문
제의 핵심을 읽어내는 지혜를 발휘하여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비해 고령사회 대비는
상대적으로 밀려나있다. 당대의 빈곤과 위기에 처
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고,
미래 노인의 삶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
다. 금년에 수립하는 3차 기본계획에는 다가오는
고령사회가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희망을 담아야 할 것이다.

여러 복지정책들의 총화로 나타나는 것이 복지
재정이다. 지난 2년간의 복지확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다.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을 감안해도 복지지출 수
준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복지지출
이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에 빠진다. 조세와 사회보험을 합산
한 국민부담율은 낮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담
을 늘리기 쉽지 않다. 세율을 높이기 어렵다면(‘증

세를 하지 않으려면') 세원을 넓혀야 한다. 다른 여러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거나, 복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부담이 과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과 세원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재원조달의 여러 수단들을 놓고 가장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비재정적인 정책수단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마을공동체의 복지자생력, 세금이 아닌 기부와 봉사같은 민간 차원의 풀뿌리 복지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에 대한 세심하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